

第245回国會
(臨時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2月9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행정입법검토의견
2. 주요현안보고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계속)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계속)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審査된案件

- | | |
|---|----|
| 1. 행정입법검토의견 | 2 |
| 2. 주요현안보고 | 3 |
| 1. 행정입법검토의견(계속) | 13 |
| 2. 주요현안보고(계속) | 13 |
|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권철현·김
일윤·박창달·백승홍·윤영탁·이규택·이원형·이재오·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 19 |
|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윤영탁 의원 외 9인 발
의)(계속) | 19 |
|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19 |

(10시42분 개의)

○委員長 尹榮卓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立法調査官 丘冀盛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尹榮卓 위원님들께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지난해 정기국회 제9차 교육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기로 보고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최근 불법·고액과외가 심각한 사회문

제로 대두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 측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얼마 전 입법예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2건의 법률안과 정부 측 입법예고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수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토록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간사들과 협의를 거쳐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이 점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많은 기대를 모았던 참여정부 지난 1년간의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준이었다

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 국민들이 진실로 원하고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서 온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해 교육 현장에서 벌어진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면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환골탈태해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환골탈태해야 우리 교육이 발전하고 21세기에는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 깊이 명심하셔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최근 신문지상을 통해 安秉永 교육부총리가 발표한 몇 가지 정책구상들을 보면서 큰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서 과감하게 개혁하여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安秉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모두가 합심하여 올 한 해를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1. 행정입법검토의견

(10시47분)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입법검토의견을 상정합니다.

행정입법 검토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98조의2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의 행정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이러한 행정입법에 대해 법률에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003년 한 해 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입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柳忠鉉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31건의 행정입법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首席專門委員 柳忠鉉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행정입법의 시행절차, 주요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행정입법은 대통령령, 부령, 훈령, 예규 그리고 고시 등 총 52건으로 이들을 제정 또는 개정 시에는 국회에 제출되어야만 합니다. 이 중 검토대상이 되는 행정입법은 대통령령과 부령 등 총 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입법의 시행절차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입법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도 행정입법 중에서 그 시행시기가 모법의 시행일을 경과한 사례는 6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마련하여 일선 행정기관에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하위법령 등이 마련되기 전에는 모법의 시행일이 도래되더라도 당해 법률 중 법률규정만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부분만 시행되며 하위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그 시행이 유보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모법의 시행일은 국민에게 당해 법률을 주지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고 하위법령의 입법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입법의 제정·개정이 모법의 시행일에 맞추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제출 문제와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총 52건의 행정입법 중 미제출된 행정입법사례는 25건이며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한 행정입법사례는 1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입법의 국회제출제도 도입취지에 따라 향후 제정·개정 시 반드시 법정기한인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회에 통지하여 동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행정입법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인 총 31건의 행정입법을 검토한 결과 29건은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과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은 통보대상 입법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부응하는 법령 정비에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시행령 제5조의 경우 모범 취지에 합치되도록 인적자원개발회의 위원에 민간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와 제7조의 경우 첫째, 계약학과 등의 경비부담 규정이 미비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직업훈련과정 학생의 납부금 규정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학생선발 규정이 미비하다고 파악됩니다. 학위과정 이전제가 된 학과 등의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선발 방법을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수업방법을 정하는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의결정족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 주요현안보고

(10시53분)

○委員長 尹榮卓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주요현안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개각 때 安秉永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인사 겸 보고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지난해 12월 24일자로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취임

한 安秉永입니다.

존경하는 尹榮卓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갑신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를 통하여 우리 부 현안과제였던 유아교육법과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종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해 주시고 예산심의 시에도 정부요구액보다 증액시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교육계가 분열과 갈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실타래처럼 얽힌 과제를 과연 어떻게 풀어갈지 어깨가 무척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난 문민정부 시절 교육부장관 직을 수행한 소중한 경험이 있고 우리 부 전 직원이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난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주어진 이 기회를 오로지 우리나라의 교육 중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조언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하여 교육을 통해 국민이 우리 교육을 신뢰하고 희망과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현안사항으로 제기되었던 과제들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고구려사의 왜곡을 시도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제기된 유사지문 출제 및 복수정답 논란 등으로 학부모,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서는 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획단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제주도교육감 당선자가 사퇴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여론이 매우 높습

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육감 선거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의 보고에 앞서 최근 정부 인사에 따라 새로 임명된 국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鄭鍾秀 평생직업교육국장입니다.

鄭 국장은 금번 정부 국장급 인사교류에 의해 노동부에서 우리 부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李鍾甲 대학지원국장입니다.

李 국장은 금번 직위공모에 의해 조달청에서 우리 부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河連燮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현안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人的資源部企劃管理室長 金永植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추진상황,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 교육감 선거관련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추진상황입니다.

추진배경으로서 중국은 1990년대부터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고구려사 및 발해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작업을 추진해 왔고 중국 사회과학원 ‘변강사지연구중심’을 중심으로 동북 3개성의 관련 연구소가 200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고구려는 중국의 중원 왕조와 연속 관계를 유지한 소수민족정권이며 고구려와 수·당과의 전쟁은 중앙정부의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서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문화유산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유적과 평양의 고구려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이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작년도에 중국의 역사왜곡 대책방안 및 세계유

산 등록에 관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가 있었고 작년부터 금년 들어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서 고구려사연구센터 설립 추진과 관련해 산 확보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다음 금년 1월에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체계적인 학술연구와 관련 활동을 지원할 민간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를 거쳐서 2월 4일 (가칭)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장소는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각계 인사 50명을 중심으로 해서 설립추진위원장 선출과 재단 명칭, 사업 범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구려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가칭)고구려사연구재단을 범국민적 기구로 설립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2월 12일, 법인 설립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2월 18일, 설립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법인정관을 결정하고 이사진을 위촉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심의와 재단 등록 등에 대한 필요한 논의를 할 계획이고 3월 1일, (가칭)고구려사연구재단을 발족할 계획입니다.

(가칭)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안)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 및 조직은 2부 7실 정도로 추진사업으로서 고구려사 관련 자료 조사·수집, 국제교류·홍보, 기존 연구소·학회·단체의 관련 사업 지원 확대·강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처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추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제기된 유사지문 출제논란, 복수정답 논란 등 출제체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고 200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출제체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5학년도 수능시험 체제가 종전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수능의 모

든 영역·과목이 학생들이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선택과목 수 증가에 따라서 출제위원이 증가되고 시험장·시험실 배치 등 시행·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험과목 수가 현행 24과목에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51개 과목으로 늘어나게 되고 아울러서 출제본부의 입소 인원도 58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장 수도 876개에서 1100개 정도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시험관리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기된 문제점입니다.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기존의 수능 출제 참여인사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특정 대학 출신 및 출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출제위원 자격에 대한 검증 체계가 미흡하고 출제위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위험부담이 높아 출제위원 참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출제 및 시행체제를 말씀드리면, 합숙출제에 의한 폐쇄형 방식으로 출제기간이 제한되어 양질의 문항 개발이 어렵고 출제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항 검토 위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출제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어려움도 제기되었습니다. 오류 및 정답 시비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제기 처리절차가 미비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인 대처가 미흡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금년 수능의 경우 시험장 및 시험실 증가로 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 및 관리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히 평가원 내 수능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무조정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교육부의 이원적 관리·감독체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저희 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을 발족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서 금년 2월 4일 기본적으로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출제위원 선정 개선에 있어서 예비 출제위원 풀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 간, 지역 간 출제위원 구성 비율을 적정화하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 출제위원을 현행 27%에서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제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평가원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충족 여부를 다단계로 검증할 계획입니다.

자격기준 예시를 보면 최근 5년간 판매용 수험서 집필자, 입시학원이나 영리목적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강의나 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은 출제위원에서 제외할 계획이고 특히 교수 출제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제수당을 일반 국가고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출제 교수 및 교사에 대한 행정적·인사상 우대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출제체제 개선에 있어서는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 수 증원과 효과적인 검토의견 전달체계 구축으로 양질의 문항을 개발하고 적정한 검색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체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공개하여 수능 출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대만에서 실시되고 있는 학생모니터링 제도를 2005학년도 모의평가 시 일단 시범 적용하여 수능의 난이도와 타당도 조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오류 및 정답 시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해서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여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오답문제를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금년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 모의평가 시 전국 단위의 시물레이션을 실시해서 시험장 배치라든지 야기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수능업무 추진을 위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전담인력을 단계별로 확충하고 교육부 관계 공무원으로 대수능지원단을 구성하여 평가원에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되어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 중에 전문가 협의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서 3월 중에 확정하고 그 이후에 제도개선안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체제는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과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비교표를 작성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 구성 내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단장으로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와 출제체제개선위원회를 3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감 선거관련 상황보고입니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수사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이 후보자들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서 1월 16일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대상인 오남두 당선자와 노상준, 허경운, 부회식, 이분들이 사퇴를 하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충청남도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9일 충남교육감 선거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내용은 결선투표과정에서 강복환 충남교육감이 이병학 후보에게 인사권 위임 각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출발되었습니다. 8월 20일 충남교육감이 기소되었고 작년 12월 1일 1심 재판 징역 2년 6월, 추징금 1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1월 20일부터 부교육감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선거인단이 소수의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되어 불법 선거운동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는 학교운영위원 수가 19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직사회의 선거 개입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 경향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직사회가 선거열풍에 휩싸여 교원 간 갈등·대립이 심화되고 학교운영위원의 선거 참여로 인한 정치화로 학교운영위원회 본래의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운동 방법의 엄격한 제한으로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선거과정에서의 부정·불법의 발생 소지를 최소화하고 교육자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개선방안에 대해서 각계의 다양한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적어도 7월 전까지는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 다양한 방안 중에는 학교운영위원 정수를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과 학부모 전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 주민직선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기관·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와도 충분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權哲賢 委員** 학원에 관한 질의는 나중에 따로 합니까?

○**委員長 尹榮卓** 그것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하고 하지요.

權哲賢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지요.

○**權哲賢 委員** 학원에 관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한다고 하니깐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별도로 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지금 다 하시지요. 지금 소위원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가 되니까……

○**權哲賢 委員** 소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여기서 먼저 대체토론하는 것이 이상하니까…… 소위원회에서 넘어오면 대체토론 또 할 것이지요?

○**委員長 尹榮卓** 전체회의에서 하게 됩니다.

○**權哲賢 委員** 그때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安秉永 교수님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거 재직 시에도 좋은 평판을 받으셨고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계신데, 오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평판을 받는다는 것은 일을 무난하게 해결한다는 뜻도 되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지금 교육인적자원부는 저희들이 4년간 지켜본 결과 아주 독할 정도로 신념을 가지신 분이 오셔야만 이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인

격적으로 고매하신 분이 오셔서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할까 그런 염려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험에 의하면 교육의 혁신, 교육의 혁명 없이는 21세기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확신입니다.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문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교육혁신을 통한 창의력이 살아나야만 과학기술이나 문화의 창의력이 돋보여져서 21세기 경쟁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한 교육의 혁신은 거의 혁명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장관님들이 많이 교체됐지만 4년 동안 교육부장관이 한 8명 정도 바뀌다 보니까 어느 한 분이 소신을 가지고 했겠습니까?

이 앞에서도 盧 대통령이 다음 교육부장관을 임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까지 했지만 결국 교육의 위신을 하늘에서 땅으로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그만 두어버리고…… 그렇게 온갖 지탄을 받던 것을 저희들이 다독거리가면서 끌어왔는데 결국은 임기를 끝내기 전에 열린우리당으로 간다는 발표를 하고 가버린 것을 보고 아주 치를 떨 정도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말 사람의 근본은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저희들이 도와주어서 임기를 연장시켜가면서까지 일을 처리하고자 했었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배신하고 어떤 정당으로 지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글펐습니다.

새로 오신 安秉永 부총리께서는 이렇게 난마처럼 쌓인 한국의 교육행정을 바로 잡으셔서 교육 혁신을 통한 21세기 강대국으로 가는 기초를 놓아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저의 진정한 부탁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예.

○權哲賢 委員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육감의 권한이 도대체 얼마나 크기에 그렇게 큰 거액의 돈봉투가 난무한 것인지, 그것이 제주도만 있었겠습니까? 전국이 다 비슷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 되어서가 아니고 교육감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 그리고 돈을 그렇게 써도 그것을 다 환수할 수 있다는 먹이사슬이 깔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도대체 교육감이라는 제도의 어떤 것들이 그런 매력을 느끼게 하며 또 그 방대한 돈을 쓰고도 다 회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커서 권한을 분권화하자 또는 내각제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특정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존경하는 權哲賢 위원님의 교육혁신을 통해 나라를 새롭게 되살려야 된다는 말씀을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결의를 가지고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제주도뿐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대부분의 교육감 선거가 혼탁과 부정·불법으로 얼룩져 있는데 교육의 지도급 인사인 교육감들이 이런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에 사실상 전 국민과 교육계 인사들이 부끄러움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시다마는 교육감이 교육감 임기 중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인사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에 관해서도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인사권에 견줄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갖고 있는 권한을 줄이는 혹은 제한,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감 선거가 이처럼 혼탁하게 된 것은 선거인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 학운위 위원 전부 합해 봐야 큰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유혹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선거제도의 개혁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요새 정책적인 토론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4명의 교육감을 새로 선출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제주도 교육감이 구속되었고, 조만간 사퇴할 것이기 때문에 60일 내에 다시 뽑아야 되는 아주 시급한 문제도 눈앞에 있습니다.

제가 정답이랄까 묘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와 교육감 선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일단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權哲賢 委員**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 문제를 포함한 이런 교육청 제도, 부총리께서도 행정학자이십니다마는 행정학자들은 교육위원회와 시·도 행정을 일원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교육학자들은 교육위원회 같은 것의 독자성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감 선출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해서 앞으로 선거 때 같이 내놓자는 특이한 안도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을 일반행정과 통합하는 문제 또 더욱 더 완벽하게 독자성을 부여하는 문제 또 특이한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세 가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문제 또 교육위원회와 시·도 의회가 이중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문제, 기타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주민대표성 문제 이런 것이 다 얽혀져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 더 광범위한 이해관계 집단과 시민사회 혹은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제도는 바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權哲賢 委員** 부총리 입장에서 단언적으로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도 곧 논쟁, 공론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칫 잘못하면 의약분업과 비슷한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부에서 미리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하셔서 입장을 가지시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사전에 관련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옹기 보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權哲賢 委員** 마지막으로 고구려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90년대부터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각종 학술대회에서 이야기해왔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까지 해서 이제 곧 결정될 상황인데 중국이 해 온 일들에 비해서 우리가 해 온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보고서에도 나왔다고 회의를 논의합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의 끝에 모임체 하나 만드는 것인데, 회의 하고 나서 추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재단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거의 결론에 도달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회의 하고 재단 만들고 그 재단에 넘기면서 책임도 넘겨버리는…… 왜 실질적인 행위를 빨리 하지 못하는지, 이것이 소위 관료들에 대한 불만 중의 하나입니다.

관료사회의 경력 발전과정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않고 늘 다른 데 가버리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만 책임을 모면해 버리면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역사의 책임이고 공직자로서의 책임이고 국가에 대한 책임인데, 그 경력 발전과정에서만 빠져나가버리면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늘 회피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담당하는 분들이 역사적 소명의식이 없으면 결국은 당해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한민족으로서 역사왜곡에 대해 함께 대응할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혹시 제의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몇 번 토론되었습니다. 교육부, 문화관광부, 외통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마는 백제나 신라에 관해서는 북한과 대한민국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고구려사 문제에 관해서는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큰 이견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기가 가장 쉬운 논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씀입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權哲賢 委員**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신라, 백제, 고구려를 공동연구하지 않고 별도로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 덩어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한쪽을 부정하면 다른 것이 같이 부정되어 버립니다. 백제의 것을 부정하면서 고구려의 것을 인정하는 연구방법은 없기 때문에 신라, 고구려, 백제는 한 덩어리로 연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사편찬위원회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 관한 연구를 왜 제대로 하지 않는지 굉장히 따졌습니다. 심지어 “우리 역사 연구자들이 과거 일제시대 때 거의 친일에 가까운 역사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연구의 한계가 너무나 노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위 말하는 재야 사학자들을 이런 연구에 포함시켜야 된다. 특정인물 계보가 아직도 한국역사학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빼놓고 어떻게 연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고구려사와 중국에 관한 연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또 교육부에서 주는 각종 연구자금을 그 사람들에게까지 지급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李重宰** 선생님이 하는 한국상고사학회입니다. 여기에도 연구자금을 주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한반도에 없었다는 특이한 논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책을 제가 일곱, 여덟 권을 읽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책을 봐도 고구려, 신라, 백제라는 이름이 중원에 나오지, 우리 만주 쪽에 나오지 않는 지도들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일제사관에 의해서 둔갑되어서 인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문제들을 왜 정직하게 하지 않는가, 그들을 왜 배제시키는가……

그래서 국회 안에 21세기동북아연구회라고 하는 의원들 모임에서 제가 회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상고사학회 분들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 제도권과 재야권에 있는 사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신라, 고구려, 백제 등 한반도 역사에 관한 논의를 했는데 그때 제도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질문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희한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고구려사연구재단을 설립해도 한통속의 사람들, 한 가지 시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버리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고사학회 분들과 조금 더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 재야 사학자들도 이번 기회에 고구려사와 중국사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고 그분들에게도 연구자금을 정부가 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판박이처럼 된 시각 내에 안주하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지 않겠는가…… 이번 기회에 우리 상고사에 대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잘 알겠습니다.

상고사와 고구려사, 발해사가 이어지도록 동북아 전역에 관한 연구를 함께 하기로 말씀을 나누는 것 같고 준비위원 중에도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상고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제 기억으로 윤내현 교수나 서길수 씨 이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문화인류학 교수, 시민사회의 진보적인 분에 이르기까지 구성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상고사연구비가 국회에서 증액되어서 2억 얼마의 돈이 이미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고사에 관한 재야연구자들의 연구성과도 이 연구재단에서 함께 모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상고사연구회, 상고사연구학회 등 상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고사연구회의 **李重宰** 선생 같은 사람은 재야 쪽에 속한다고 보는데 그분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연구재단 설립을 끝내기 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교육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 1일에 재단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경과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金敬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敬天 委員** 새천년민주당 광주 동구 출신 **金敬天** 위원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부총리 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취임한 **安秉永** 부총리님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이 인사

이동되셨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정치권이 흔들리고 또 교육계가 흔들리고 경제가 불안하고 국민들한테 희망보다는 실망을 주고 있는 이때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육계가 진정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부총리의 역할이 크게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이미 부총리께서는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도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한 바 있기 때문에 더더욱 기대감이 크고 또 책임이 무겁다고 하신 말씀을 인사말씀에서도 언급했지만 거는 기대에 잘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중국의 고구려사왜곡대책에 대한 주요골자라면 결국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동북공정’ 프로젝트 및 지난해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 문화유산 등재신청에 대한 심사가 함께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데 중국 정부가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자신들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는 단호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남북의 분단 이후 남한에서는 200여만 명이 살고 있는 동북 3성에 대한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가 그동안 미진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크게 가져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부가 보고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르면 동 프로젝트에서는 조선족을 비롯한 변방의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중국 동포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연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포의 국적취득운동과 관련해서 재중 중국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는데 소수민족에 대해 특별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번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서 재중 200만 중국 동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발 빠른 대책 강구도 중요하겠지만 이벤트식·조립식 재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보는데 이미 주요현안보고에서 나왔습시다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준비의 핵심적인 요건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존경하는 金敬天 위원님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민족적 의지를 표시해야 마땅하나 자칫 외교적 마찰로 크게 번져서 중국에 있는 200만 교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동안 고구려사나 한국의 상고사 혹은 발해사 등 동북아 역사에 대한 우리 학계의 연구가 충분치 못했던 것으로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구려사를 전공한 학자 수가 20명 안쪽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가적인 영토나 민족사적인 문제와 연관해서 준비가 아주 미진해서 고구려사연구재단을 창립함과 동시에 한국민족과 연관된 동북아 역사 및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심도 있게 진척시킬 생각입니다.

이런 학문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국제적으로 쟁점화되었을 때 우리가 자신 있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중국의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해서 외교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학문적인 대응부터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인 혹은 사회적인 대응준비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敬天 委員 이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아무리 급해도 철저한 연구와 뒷받침이 필요한 것인데 이벤트식·조립식 재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물론 가칭이기는 하지만 고구려사연구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고구려사에 대한 학술연구 구심점 마련 지시가 지난 12월에 있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그런데 두 달도 채 못 되었는데 고구려사연구재단설립추진위원회가 지난주에 개

최되었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대책이 일사천리 격으로 진행되는 데 대한 우려를 본 위원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총리님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잘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2004학년도 수능에서 유사지문 출제 논란이라든지, 복수정답 논란이라든지, 출제자 경력 시비 등 시험출제체제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화되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2005학년도부터는 제7차 교육과정의 반영으로 모든 영역을 임의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수능으로 변화되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리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이번 2004학년도 수능시험 과동을 계기로 교육부가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05학년도 수능시험은 7차 교육과정이 반영되는 첫 시험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택형 수능으로 인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과목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느끼는 학습부담은 줄지 않아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났다는 보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는 과목이 줄어드는 대신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선택과목에 대한 심화학습이 첫 번째 이유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서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과 취지가 사교육비 부담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바래지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핵심적인 부총리님의 말씀을 정리해 주십시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제7차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걱정이 대단히 큼니다.

우선 선택과목의 경우 과거에 24과목이었는데 51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능 출제부터 관리체제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우리가 관심을 써야 할 부문이 너무 큼니다. 거의 모든

문제에 관해서 면밀하게 미리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선택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수가 많고 시험과정을 관리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또 아시겠습니까마는 과목에 따라서는 폭넓게 학교교육 과정에서 교수되기 어려운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예컨대 선택과목이 제시는 되었습니까마는 실제로 교수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회교사라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담당교사를 투입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을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몇 번의 시뮬레이션 과정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또 대수능지원단이 지금부터 관여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 연말쯤 해서는 수능시험을 무난하게 치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金敬天 委員 문제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 선택형 수능에 따른 수능의 난이도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권 추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보다 행복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선거 관련인데, 저도 지역에서 교육감선거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하여 제도개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7월 이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6월 충남교육감선거, 7월 전북교육감과 서울교육감선거 그리고 12월에 대전교육감선거가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그렇습니다.

○金敬天 委員 이렇게 금년에 교육감선거가 줄줄이 네 번이나 있는데 그렇다면 동 개선방안이

선거 이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와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선거제도의 개혁은 어쩔 수 없이 법률개정을 요하기 때문에 입법화가 언제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와 직접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번 회기에서 어려운 경우에 6월에 새로 구성되는 회기에서 말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7월 이전에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 뜻 안에 담고 있습니다.

최송합니다, 이 문제가 미리 풀려졌어야 자신 있게 현안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차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면모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敬天 委員** 그렇다면 6월 이전에 입법화가 되어야만 7월부터 적용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입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순순히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혹 이 문제에 대해서 입법화되기 전에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지금 그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한목에 완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도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金敬天 委員** 그러면 불법이 자행될 것이라는 것을 불을 보듯 흰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허술한 교육행정 속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일단 지도·감독이라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다시는 교육계에 이런 혼탁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金敬天 委員** 기대를 크게 해 봅니다.

마지막 교사평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로 최근 安 부총리께서 밝힌 교사평가제도 도입과 경제부총리가 밝힌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발표로 교육계가 약간 술렁이고 있습니다.

부총리가 밝힌 경제원리 도입에 대해서 좀더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교사평가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십시오.

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일단 저희들은 '교원평가제'라는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흔히 박봉에 시달리면서 묵묵히 교단에 서 있는 교원들이라는 말씀들을 하면서 교원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제기 하기를 꺼려 왔었고 아직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원들도 보다 긴장하고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도는 공교육이 제도에 올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이 되든지 간에 교원평가는 서서히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원평가라는 표제가 세상에 드러나면서부터 벌써 교원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처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어떤 평가방법이 가장 좋으나, 시간을 어떻게 두고 단계별로 진척을 시켜야 되느냐, 이해관계자와 토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등 정책적인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정된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대체적인 방도에 이르기까지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교원평가문제에 대해서 진일보한 정책적인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에 경제부총리께서 경제원리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현안에 관해서는 간혹 다른 부처와 면밀한 사전 협의도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자기 부처의 입장을 조금 강하게 피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도 경제적인 원리라고 할까, 경제적인 관점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일반적인 논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마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敬天 委員** 물론 어느 사회에도 경제원리와 경쟁논리가 배제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교육에 경제원리, 경쟁논리가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자칫 비교육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저도 개

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金敬天 委員** 어쨌든 부총리께서 모든 팀들과 함께 교육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행정입법검토의견(계속)

(11시50분)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시 간입니다마는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결의 못한 것을 결의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입법검토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의결정족수 때문에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받아들여 관계부처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부처에 통보할 내용의 문안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건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마침 법률심사소위원장 직무대리인 李在五 위원님이 나오셨고 끝날 무렵에 의결하고자 하니까 우리가 질의하는 동안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현안보고(계속)

(11시52분)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한나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安秉永 부총리님께 교육발전을 위해서 일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와 제 질의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항상 일이 터지고 나서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고구려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시도에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특히 교육인적자원부가 매우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고구려사 왜곡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17일 시민단체, 역사문제연구소 등 87개 단체들이 연합해서 이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의 역사왜곡과 중국교과서의 한국사관련 오류문제가 매우 긴급한 사안이라고 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청와대, 외교통상부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방금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교육부가 제때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 고구려사 문제와 연관해서 1억 6000만 원의 연구비를 연구자들에게 지급한 바가 있으며 또 국사편찬위원회와 정신문화연구원이 연관해서 중국의 역사왜곡에 관한 정책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은 곧 고대사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고 국책연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이고 대대적인 고구려사 연구를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때늦은 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수년 동안 계속적으로 고구려사 연구문제에 관해서 교육부가 얼마간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10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소극적이거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9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매우 소극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중국은 우리 고대역사인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고 5개년 계획까지 추진을 했다는 발표가 2002년에 이

미 있었고 2003년 6월에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액션을 언제 취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2003년 12월 16일, 그것도 국무회의에서 학술연구기구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여기에 대한 태도를 취하는 것 같은데 매우 미약하고 소극적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2002년 8월에 중국의 역사왜곡에 관해서 정책연구과제가……

○김정숙 위원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이것을 강화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또 이것도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집안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이 있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아시겠습니까만 얼마 전에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충북대의 이용조 교수와 아주대의 이해은 교수가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에서 집안의 고구려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북한에서 고구려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두 가지의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올 6월 중국 소주에서 열리는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문화유산이 등재될 것이 비교적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은 계속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남북 간에 노력을 함께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공동연구나 조사활동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획도 세우셔야 할 텐데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저희가 고구려연구재단을 창설하면서 거기서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외교부나 문화관광부에서도 남북한이 고구려사 문제와 연관해서 소관 영역에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책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부총리께서 취임하시자마자 수능시험에 대해서 몇 번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특이하게 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개선방안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그동안 전문가들이 제기해 온 것이나 언론에서 지적되어 왔던 정도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또 2008년부터 뭘 바꾼다고 자꾸 얘기하시고, 수능보다는 내신성적을 더 많이 반영하겠다 또 이과 지원은 수학과 과학을 위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큰 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선 급하니까 내년도의 수능출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委員長 尹榮卓 김정숙 위원님, 미안합니다.

지금 소위를 개의하려고 위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지요.

○김정숙 위원 알았습니다.

1분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소위 끝나고 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저도 질의하던 것 마저 하고 금방 가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소위 끝나고 하시지요.

○김정숙 위원 조금만 하고 금방……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질의시간을 주지 말든지……

○委員長 尹榮卓 질의시간은 5분씩 다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자꾸 위원장님은 남성위원이 뭐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가고 여성위원은 질의도 못 하게 합니까? 내가 그래서 항상 불평하지 않습니까!

○委員長 尹榮卓 왜 마무리되는 국회에서 꼭 그렇게 얘기합니까?

○김정숙 위원 항상 그렇게 진행하시니까 그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委員長 尹榮卓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오늘도 5분 이상 했잖아요!

○김정숙 위원 질의 마치려고 하는데 마무리를 하게 해 주어야지요!

(장내소란)

○委員長 尹榮卓 다음 윤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경식 위원 한나라당 청주 흥덕 출신의 윤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安秉永 부총리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교육감선거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제주 교육감선거사건 이전에도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교육부 자체적으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별반 수립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적인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된 채 또 다시 제주 교육감선거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찾아서 분석을 하고 대책수립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중요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해서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에 질의를 했더니 입법참고 질의회답서가 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교육감 선거제도 그리고 주요 국가의 사례에 관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주무국장님께서 부총리께 보고해 주시고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부에서는 그동안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기적으로 항상 조금 뒤늦었고 철저하지 못했다는 말씀은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만 91년부터 96년까지는 교육감을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부정·혼탁선거로 이어졌기 때문에 97년부터 99년까지는 학교당 1명의 학운위 위원하고 교원단체 추천인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선출하는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거인단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생겨서 2000년 1월부터는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선출로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이 제도는 숫자가 제법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다 금품이나 향응으로 매수한다든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강도가 높아져서, 특히 작년부터는 이 숫자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가 이렇게 왜곡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계속 정책토론을 했습니다만 아직 불길을 잡을 수 있는 제도개혁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윤경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직선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경식 위원 그다음에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면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겠다, 이렇게 연설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인지, 어떻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날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까만 제가 12월 23일 임명되었고 사실상 예산국회가 막바지였습니다. 그래서 제 책임 하에 이것을 발표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까만 빠르면 내주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경식 위원 조속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선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밝힌 교육개혁에 관한 내용 중 교사평가와 관련해서 현재 구상하고 계신 구체적인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또 언제부터 이런 소신을 갖고 계셨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신 위주의 대입전형을 2008년도부터 한다고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확정된 방침인지, 부총리께서도 여기에 찬성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방침이 공식적인 교육부의 방침인지, 국민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고 있고 특히 예비 중3 학생과 학부모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명확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강조하시는 엘리트교육의 요체가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경기도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목고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수년 전부터 해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이 정책적으로 토의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면 구체적인 방안을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08년도부터는 대학입학전형제도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고기간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기본 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곧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저희 부처에서도 서로 협조해 가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중·고등학교 교육을 보다 정상화하면서 내신성적을 더 중시하는 대입제도로 가자, 그런 정도의 대체적인 합의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쯤 되면 2008년 대입전형제도에 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엘리트교육'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흔히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교육학자들은 '수월성 교육'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대중적인 공교육과 수월성 교육이 함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특목고 벨트를 구상하고 있는데 과학고는 몇 안 되고 외국어 고등학교는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최근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일류대학교 가기 위한 건널목 노릇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이처럼 많이 설립되는 것은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崔榮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榮熙 委員 장관님께서서는 오늘이 16대 국회의 처음이고 우리는 마지막인데 분위기가 이렇게 어수선해서 유감스럽습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과거에도 부총리를 경험하시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셔서 앞으로 교육부를 잘 이끌어 가리라 믿고 안심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대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하고 있는데 우리는 훨씬 뒤늦게 대응한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연구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는 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을 하면서 이왕 연구재단을 설립한다면 연구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단의 명칭도 (가칭)고대사연구재단 또는 한반도북방연구재단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구려사연구재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대학수능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교육부에서 별로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터졌습니다.

장관께서 적어도 2003년도 국정감사 기록이라도 한번 보시고 대학수능시험 출제, 특히 7차 교육과정에 관해서 어떤 질의를 했는지 보시면 교육부의 유능하신 여러 분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서 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차 교육과정에는 일반선택이 26과목, 심화선택이 56과목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일선 교사와 평가 전문가들은 과연 이렇게 많은 과목으로 어떻게 국가 수준의 시험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고 7차 교육과정을 도입한 이후 올해 굉장히 당황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시험범위도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서 통합교과형 문제를 지향하는 수능시험의 성격상 학교수업만으로는 도저히 따라가

기 어렵다는 문제제기가 학부형이나 학생들로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고교에서는 50여 개의 시험과목을 일일이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교과목만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려고 했는데 7차 교육과정을 하면서 사교육비가 더 느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예비고교 3학년생 3명 중 1명 이상이 사회탐구, 과학탐구 영역에서 자신이 선택하려는 과목들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한다면 어떻게 공부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73.6%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학원에서 공부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수능시험의 출제·관리 개선방안의 내용은 대단히 중요하고 꼭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수능시험의 출제와 관리체계만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불씨는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과 본 위원이 지적한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진언을 하고 대안을 내놓아도 국회 4년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 같은 인상을 매우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 선출하는 데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대통령선거, 대선자금, 총선자금 등 대한민국이 전반적으로 썩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런 인식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교육감을 뽑는 것은 더 썩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했고 또 대안을 주셨는데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는 배경은 지나치게 적은 선거인수에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들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선거를 다른 선거와 연계해서 한꺼번에 다 하든지…… 교육감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다르고 서울 다르고 제주도 다른데 이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입법과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선거인수가 너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보다 수를 대폭 늘리고 선거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20세 이상의 주민투표로 실시한다면 현재 임기에 맞춰 해마다 지역별로 선거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임기를 종료시키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의원선거와 병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입법과정에서 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데 선거인수를 좀더 광범위하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다 할 것이 아니라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학부형, 이러한 범위로 수를 정하든지 해서 차분하게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부총리께서는 전에 갑자기 그만뒀서 뜻이 못 이룬 부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생각을 하시고 한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존경하는 崔榮熙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제 결의의 일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사연구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개의 재단 명칭이 나왔었습니다. 예컨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북방, 동북아, 고대사, 이런 몇 가지가 나와서 준비위원회에서 굉장히 열띤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구려사에 초점을 두고 상고사와 발해까지 이어지는 폭넓은 동북아에 관한 연구를 하기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준비위원, 사계의 전문가들 50명이 오랜 토론을 통해서 일단 이름은 고구려사연구재단으로 하지만 동북아 전반의 영토, 민족, 역사문제에 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기로 합의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뿐이지 연구영역을 굉장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능시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서 탐구를 하겠습니다. 겉치레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찌른 말씀을 주셨는데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약속을 드

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능시험이 굉장히 걱정스럽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철저하게 기획하고 관리할 것인지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선택의 경우에 저도 걱정되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심각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컨대 사탐과 과탐의 경우 선택과목을 대부분의 학교가 7, 8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택하려는 과목은 수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최악의 경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조하신 그 신문에 난 것은 샘플 사이즈가 좀 적었습니다. 그것이 전체를 반영하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만반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와 연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선거인단이 적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4개의 방안 중 한 가지도, 국회의원선거라든가 지방의원선거와 연계해서 병행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네 가지 방법 중 이것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崔榮熙 委員** 安 부총리처럼 몇 년 쉬었다 또 부총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다음은 박창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달 위원** 한나라당 박창달 위원입니다.

먼저 安秉永 부총리님과 새로 오신 몇 분의 국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가 다가오는 4월 15일 제17대 총선 전의 마지막 상임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월 15일 총선 이후에 다시 상임위를 열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고 아마 4월 15일 이전에는 상임

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현안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겠습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에 대한 문제들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피하고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방법은 우리 당 정책위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현안사항인 제주도 교육감선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재선거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면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지요?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예.

○**박창달 위원** 대충 4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그렇습니다.

○**박창달 위원** 이번 총선에 나오시는 단체장들의 보궐선거가 4월인데 총선 때문에 6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보궐선거도 4월에 총선이 있고 학교 일정을 봐도 그렇고 선거인단 임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감 선거 일자를 탄력성 있게 법을 바꾸어서 총선 이후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60일을 80일로 고치든지 해서 4월 15일 지나서 6월 정도에 하는 것으로, 총선일자하고 중복이 없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 오늘 답변이 안 되면 관계실무자들과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安秉永**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 가지고 대단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대로 한다면 지금 교육감이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사퇴날짜가 언제냐에 따라서 선거날짜가 결정됩니다. 예컨대 당장 2월 12일에 사퇴한다고 하면 총선 직전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부처 간에 협의하고 입법예고하면 3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을 고쳐서 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의원입법에 의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것을 추진하신다면 저희들은 당장 협조해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도 이 문제로 대단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할 생각입니다.

○박창달 위원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전부 마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시에 민주당, 열린우리당, 1시 30분에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각각 있습니다. 또 본회의가 2시 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尹榮卓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권철현·김일윤·박창달·백승홍·윤영탁·이규택·이원형·이재오·최영희 의원 발의)(계속)

4.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윤영탁 의원 발의)(윤영탁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委員長 尹榮卓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3건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심사소위원장직무대리이신 李在五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小委員長職務代理 李在五 李在五 위원입니다.

金敬天 의원 등 10인과 尹榮卓 의원 외 9인이 각각 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43회 국회 및 제244회·제245회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03년 12월 9일과 10일 그리고 2004년 2월 9일 3일간에 걸쳐 동 법률안

에 대하여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과외교습자들의 학원 형태의 시설과 외 및 고액과외를 규제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를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를 제한된 범위로 한정할 경우 자택에서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교습료를 받고 건전하게 교습행위를 하고 있는 생계형·소규모 공부방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습자의 주거지 외의 교습 가능한 장소를 대통령령에서 예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는 교습장소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사실상 관할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이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교습장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개인과외교습료의 고액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감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료에 대하여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그밖에 법체계상의 문제로서 교원의 개인과외교습 금지 의무를 명확히 하였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복잡한 벌칙규정을 간소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尹榮卓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5항 학원의설립·운

영및과의교습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安秉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出席委員(12人)

權 哲 賢	金 敬 天	김 근 태	김 정 숙
박 창 달	윤 경 식	尹 榮 卓	이 규 택
李 在 五	정 몽 준	趙 富 英	崔 榮 熙

○請暇委員(2人)

薛 勳 玄 勝 一

○出席專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柳 忠 鉉
전 문 위 원	鄭 順 泳

○政府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부 총 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安 秉 永
차 관 보	鄭 奇 彦
기 획 관 리 실 장	金 永 植
학 교 정 책 실 장	李 修 一
인적자원정책국장	鄭 奉 根
평생직업교육국장	鄭 鍾 秀
대 학 지 원 국 장	李 鍾 甲
감 사 관	李 鍾 瑞
교원정책심의관	李 英 萬
교육자치심의관	鄭 永 宣
비 서 실 장	趙 興 來
정 책 보 좌 관	河 連 燮
총 무 과 장	黃 洪 奎

【報告事項】

○議案回附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중개정法律案(홍문종 의원 대표발의)

(2월5일 홍문종·황우여·박혁규·오세훈·최연희·정문화·원희룡·김정부·신현태·윤경식·전재희·이승철·이근진·오경훈·이규택·박상규·박진·서병수·김황식 의원 발

의)

韓韓精神文化研究院育成法中改正法律案

(2월5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2월6일 회부됨

중국의고구려역사왜곡및중국역사편입시도중단촉구결의안

(12월12일 심재권·김원기·권오을·이낙연·김성순·유시민·조성준·박창달·황우여·박종완·김원웅·손희정·장성원·김운용·김옥두·김홍일·설훈·최명원·정진석·김택기·최영희·김영환·이창복·강운태·신기남·이해봉·김근태 의원 발의)

12월13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학원도시지원에관한법률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12월24일 박재욱·이양희·이방호·고진부·허태열·최선영·김용학·이해구·권기술·박희태·권태망·임인배·정갑윤·박승국·박명환·김병호·이원창·김광원·정창화·김찬우·송광호·강성구 의원 발의)

12월26일, 관련위원회로서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 의견제시기간을 정하여 회부됨

○請願回附

초·중등교육법개정에관한청원

(2004년1월27일 경기도 의왕시 내손2동 한신빌라 107-303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 김관태로부터 황우여 의원 외 1인의 소개로 제출)

1월29일 회부됨